

셀트리온그룹 회계감리 조기종결 요청서

□ 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는 경향신문이 '22.1.14. 금융위원회의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안 증선위 논의'를 대외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 80만 소액주주를 대표하여 금융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주식시장의 공정성 제고, 둘째. 투자자 보호 책임, 셋째. 책임행정 구현, 넷째. '공정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하여 셀트리온의 회계감리 결과를 조속히 종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 2018.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판권 매각대금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이래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를 착수하였지만, 감리 연장에 관한 '내부 승인 규정도 없이' 4년 이상 막무가내로 감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글로벌 직판 판매시스템'을 갖춘 헬스케어에 원재료와 중간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기존의 테바 등 글로벌 유통사에 지급할 마진 30%를 고스란히 국부의 증대(GNP)로 쌓을 수가 있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적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그룹 죽이기' 일환으로 12년간의 회계장부를 감리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적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4년 이상 감리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만큼, 금융위원회에서는 감리 결과를 조속히 종결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책임행정의 소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셀트리온의 감리가 '구체적인 혐의 없이' 4년 이상 지연 됨에 따라 감리 결과의 불확실성을 빌미로 셀트리온그룹의 주가 폭락 등 주주가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 주가조작을 일삼는 공매도 세력과 일부 언론은 '분식회계 혐의'라는 부정적인 뉴스를 지속 생산하여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위축하여 수요를 차단해 버림으로써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 셀트리온 그룹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주주는 회사의 가치인 펀더멘털과 무관한 요소인 '계속되는 악의적 루머'의 유포로 주가 폭락을 견디지 못하고 투매를 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주주는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성이라고 치부하며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그룹 3사가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의심하지만, 첨단 바이오의약품인 램시마/트룩시마 등은 '글로벌 생산과 유통을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서 국내는 "비교대상 기업과 제품이 전무"합니다.

○ 외부에 공표한 한국회계기준원의 단가 인하분 변동대가 추정 및 추정치의 제약, 그리고 그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8가지 모델 어디에도 셀트리온 그룹의 첨단 바이오의약품 재고자산을 '적용 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 재고자산 평가 다툼도 셀트리온 그룹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경미함에도, 마치 중대한 회계상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누설함으로써 자칫하면 감독당국이 공매도 세력의 주가조작에 부응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회계학 교수가 매출채권의 실재성과 대손가능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헬스케어의 유통파트너사는 글로벌 탑10 기업 테바 등으로 채권회수 가능성이 100%인 매출처 이기에 대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 금융감독원의 관계자가 감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은 직무 관련자에게 '비밀엄수 의무'를 부여하였고,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감리 진행 사안이 외부에 유출되어 셀트리온 그룹과 80만 주주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 마땅히 내부통제 조직을 신속히 가동하여 비밀누설자를 찾아내어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고,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서로 다를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요구함은 물론, 국가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비밀유출자와 허위정보를 생산한 언론사를 상대로 비밀누설죄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엄정한 고발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 이상의 주장을 토대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개사 80만 주주는 금융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 하나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유출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을 상대로 감찰을 실시하고 진상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 하나 : 회계감리 진행 사안을 보도한 아래 2건* 기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2021.11.23. 한겨레신문 박종오 기자의 “금융감독당국 심판대 오른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3대 쟁점

* 2022.1.14.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의 “분식회계 의혹 셀트리온, 내주 증선위 논의....금감원 검찰 고발 의견”

○ 하나 : 회계감리가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공하여 투자심리를 위축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며 공매도 세력들의 주가조작에 악용되고 있는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하나 : 셀트리온 그룹과 80만 주주의 재산권과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리 결과를 조속히 종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2. 1. 17.

셀트리온 소액 주주연대 대표 오 윤 석